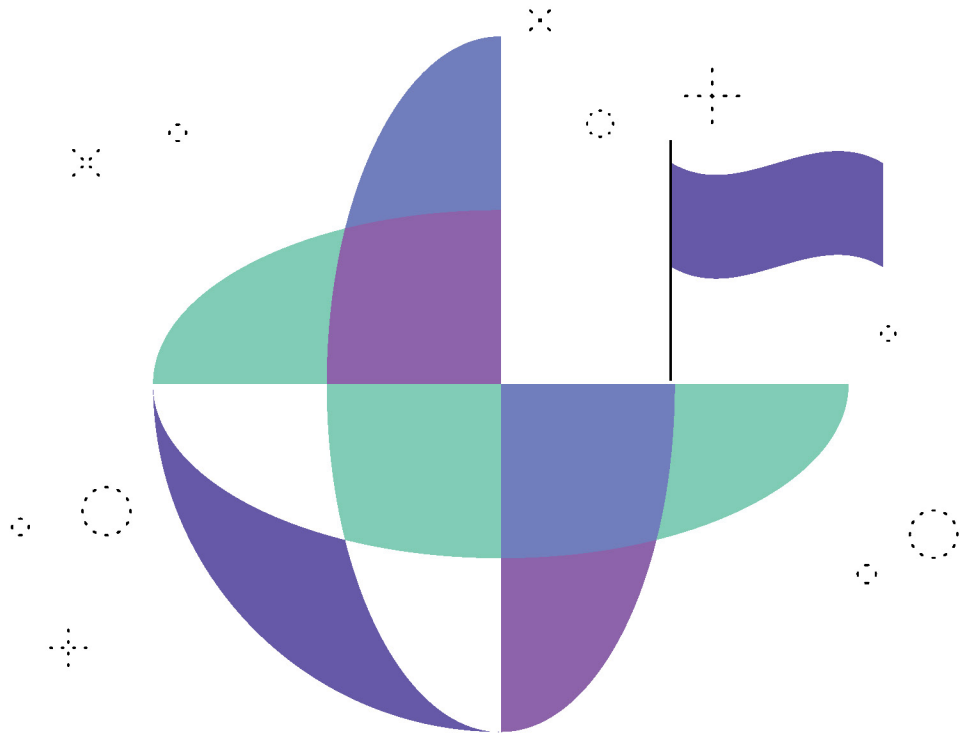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23. 1. 17.(화) 14:00~16:00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채널](#)



주최 |  여성가족부

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 차관 이기순입니다.

먼저, 이번 공청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의견을 나누어주실 토론자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정부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기본계획” 등 행정적,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지역에는 가족센터(230개소)가 운영되어, 연간 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결혼이민자와 가족이 한국어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16만명에 이르렀으나,

\* 다문화학생 현황: ('18)122천명 → ('22)168천명(교육통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40.5%로 무척 낮은 상황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2.1%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21)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장기 거주 등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입국 초기, 중장년, 노년기까지 다양해진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필요합니다.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15년 이상 거주자: '18년 27.6%→'21년 39.9%

올해 수립되는 제4차 기본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향후 5년간 다문화가족정책을 이끌 종합적 방향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 아래, ①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②자녀 성장단계별 학업·진로 지원, ③인권보호 및 차별해소, ④다문화가족 지원기반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더욱 발전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계묘년에는 토끼처럼 건강하고 힘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여성가족부차관 이 기 순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미있는 인사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신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님과 행사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이 4번째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향후 5년을 이끌어 갈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 다문화가구원 수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와 정책단계마다 다양한 정책수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의 비중도 증가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연구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그간 사회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였고, 지난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도 점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의 실시결과를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였고,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분야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전에 추진된 세 차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서비스가 확대되었고,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포용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는데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인권보호나 폭력피해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와 소통 확대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신 의견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에 두루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도록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공청회 좌장을 맡아주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님,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훈훈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문 유 경**

# 프로그램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구분		내용	비고
14:00~14:1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선언</li> <li>• 인사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li> <li>-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li> </ul> </li> </ul>	사회: 전기택 본부장
14:15~14:3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발표</li> </ul>	다문화가족과장
14:30~15:3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토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장 :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li> <li>- 토론자 :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장흥성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li> </ul> </li> </ul>	
15:30~16:0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li> </ul>	

# 목 차

## 발 표

-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발표 ..... 1  
다문화가족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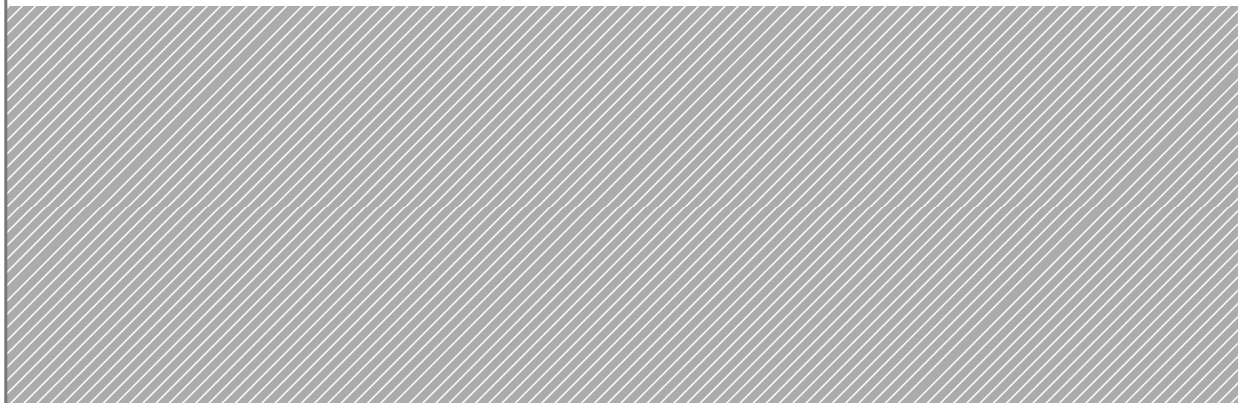
## 지정토론

-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 15
- 장흔성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19
-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3
-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7

| 발표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발표

● 다문화가족과장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23 ~ 2027]

2023. 1. 17.

※ 본 내용은 초안으로 관계기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 목 차

- I 수립배경 및 정책환경
- II 제3차 기본계획 평가
- III 제4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 IV 분야별 정책과제

# 수립배경 및 정책환경

1. 수립배경
2. 추진경과 및 계획
3. 정책환경 분석

## 1. 수립배경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에 기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가족지원법

- ◆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차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그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5년을 이끄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필요

## 2.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1) 추진 경과

- ☞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및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실시
-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22.4~12월)
  - 분야별 의제발굴을 위한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실시
- ☞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22.9월)
- ☞ 기본계획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1차 의견수렴(`23.1월)

### 2)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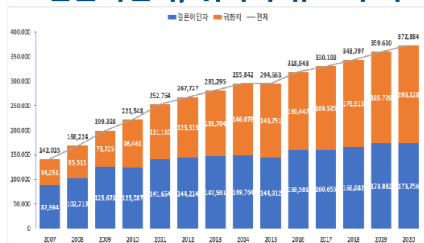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2차 의견수렴**(`23.1월)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발표(`23.3월 예정)

## 3. 환경 진단 (1) : 정착단계별 수요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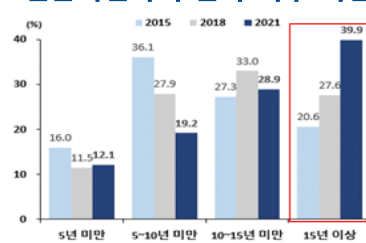
**장기 거주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부모, 귀환 다문화가족 등 정착단계별, 가구유형별 다양한 정책수요 증가**

다문화 가구원 수는 112만명으로 지속 증가 중  
 15년 이상 장기 거주자 비율이 40%에 이르며, 50대 이상 비율도 25% 이상  
 다문화 한부모가족 비율이 10.9%이며,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도 발생

결혼이민자, 귀화자 규모 추이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 기간



**입국 초기 한국사회 적응 지원 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자 및 다양한 가구 유형의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필요**

### 3. 환경 진단 (2) : 학령기 자녀 지원 필요성 증가

학령기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등 학교적응 및 진로 설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 대두

학령기 자녀 수가 지난 5년간 63% 증가, 미성년 자녀 중 학령기 비율 60.4%

구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8세
'17년	115,085명 (51.7%)	81,826명 (36.8%)	25,544명 (11.5%)
↓	530명, 0.5%, 구성비 12.1p 감소	27,109명, 33.1%, 구성비 0.8p 증가	40,477명, 158.5%, 구성비 11.3p 증가
'21년	114,555명 (39.6%)	108,953명 (37.6%)	66,021명 (22.8%)

학력격차가 심화되어 향후 사회계층 격차로 이어질 우려('18년 18%p → '21년 31%p)  
자녀의 지원 수요는 학습지원(50.7%), 진로상담(45.9%) 순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 3. 환경 진단 (3) : 낮은 다문화 수용성

차별 경험은 감소하고 있으나, 직장 등에서 차별이 잔존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아직 낮은 수준

결혼이민자가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교류 자체가 적어진 결과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15년 40.7% → '18년 30.9% → '21년 16.3%

차별을 경험한 장소는 직장(69.8%)이 가장 많음

청소년(71.39점) 대비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52.27점)은 낮은 수준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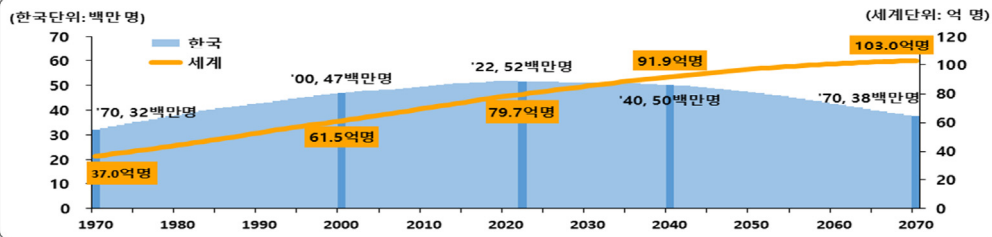
\* 20대 54.40점 > 30대 52.98점 > 40대 52.77점 > 50대 51.80점 > 60대 이상 49.98점

다문화가족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차별 해소 필요

### 3. 환경 진단 (4) : 인구감소 대응 논의 활성화

인구절벽 현실화에 따라 이주민 유입 확대 등 논의가 대두  
이에 대비한 범정부적 정책방향 논의 활성화 예상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70년에 3천 8백만 명으로 감소 전망



이주민 유입 및 외국인 가족 증가에 대비한 범부처 지원체계 논의 활성화 예상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 협력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제3차 기본계획 평가

1. 제3차 기본계획 성과
2. 향후 과제

# 1. 제3차 기본계획 성과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서비스 확대

- 전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확대  
\* 방문교육, 통번역, 사례관리,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언어발달지원 등
- 다문화 한부모가족 및 본국 귀환 결혼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 임신·출산·영유아기 맞춤형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지원 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 이중언어 사용환경조성 및 인재DB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연계
-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 심리상담 및 진로컨설팅 도입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수립·이행  
\*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학교 적응, 심리·정서 지원, 다문화수용성 증진 등

##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권보호

-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소통공간 운영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적 광고 규제 근거 마련 및 온라인 모니터링
- 13개 언어로 24시간 365일 폭력피해 상담 제공 및 상담소·보호시설 운영

# 2. 향후 과제

-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가 보편적 가족 지원체제로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 및 귀환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수요 대응 강화
- 학업부적응, 학력격차 해소 및 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화, 내실화
- 국제결혼중개업 인권침해 모니터링 및 폭력피해 지원체계 역량 강화, 차별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개선을 통한 인식 전환
-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추진 기반 내실화



# 제4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 1. 비전 및 수립방향

## 1. 비전 및 수립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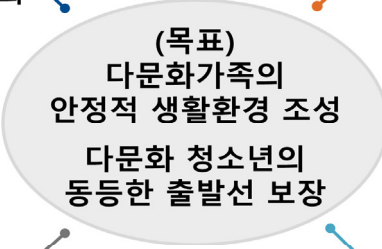
비전(안) :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 1.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 1) 상황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 2) 교류·소통 활성화
- 3) 자립역량 및 취창업 기회 확대
- 4)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2. 자녀 성장단계별 학업·진로 지원

- 1) 영유아기 성장 발달 지원
- 2) 초·중등기 학교생활 적응 지원
- 3) 청소년기 진로 및 사회진출 준비
- 4) 다문화자녀의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 3. 인권보호 및 차별 해소

- 1) 건강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3) 다양성 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 4) 다문화 이해교육 체계화

### 4. 다문화가족 지원기반 강화

- 1) 서비스 전달체계 내실화
- 2) 정책 환경 점검 및 개선
- 3) 정책추진체계 간 실질적 협력 강화

## IV 주요 정책 과제

- 1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 2 자녀 성장단계별 학업·진로 지원
- 3 인권보호 및 차별 해소
- 4 다문화가족 지원기반 강화

### 1.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 1. 상황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 장기 정착 지원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강화
-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전·보건 역량 강화
- 다문화 한부모가족 및 귀환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2. 교류·소통 활성화

- 교류·소통 기반 확대
- 지역사회 중심의 교류·소통 프로그램 활성화

#### 3. 자립 역량강화 및 취·창업 기회 확대

- 자립 및 취업 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연계
-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 및 경영 지원
- 결혼이민자 영농정착 지원

#### 4.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결혼이민자의 정책과정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2. 자녀 성장단계별 학업·진로 지원



### 1. 영유아기 성장 발달 지원

- 부모교육 및 자녀 양육환경 개선, 이중언어 친화적 가족환경조성
- 언어발달 및 생활습관 형성 지원

### 2. 초·중등기 학교생활적응 지원

- 학교교육 진입 지원 및 학부모 역량강화
- 기초학습 지원 및 한국어 능력 제고
-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강화
- 중도입국 자녀 및 학교밖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3. 청소년기 진로 및 사회진출 준비

- 이중언어 활용능력 등 재능 개발
- 다문화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프로그램 다양화
- 후기 청소년 및 청년 자녀 지원

### 4.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 심리·정서안정을 위한 상담 강화
- 사회성 및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확대
-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

## 3. 인권보호 및 차별 해소



### 1. 건강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및 교육 확대
- 국제결혼이민관 확대 및 역할 강화

###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입국 전-입국초기 폭력피해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 폭력피해 실태 파악 및 조기발굴·대응체계 내실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 3. 다양성 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 미디어의 다문화 수용성 강화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확대

### 4. 다문화 이해교육 체계화

-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 이해교육의 부처 간 연계 강화

## 4. 다문화가족 지원기반 강화



### 1. 서비스 전달체계 내실화

-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안내를 위한 연계 강화
-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2. 정책 환경 점검·개선

-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및 컨설팅
- 정책환경 주기적 모니터링 및 환류

### 3. 정책추진체계 간 실질적 협력 강화

- 범부처 정책조정 및 협력 강화
- 주요결혼상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체계 구축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 지정토론

-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 장흔성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 ○ 전체 방향: 증거기반 정책의 체계화, 수요자 피드백 활성화, 세부사업의 효과성 재점검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한국생활 지원, 나아가 다양한 이민배경 시민들이 차별·배제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우리 사회 전반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정책 계획이다. 지금 검토 중인 4차 기본계획은 이전 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다양한 정책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특히 세 가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현실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의 체계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증거기반 정책으로 보다 성숙되고 선진화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초기의 정책이 긴급한 문제 대응에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피드백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민배경 가족구성원들의 증장기적인 욕구와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의 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셋째, 정책의 큰 목표와 비전, 그리고 세부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책 일선에서 일회성 소규모 사업들이 적절한 평가 없이 반복되는 문제는 없는지, 향후 어떤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지의 기준 등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계획안에 담긴 정책 비전과 목표는 정책 대상(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다문화 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만 한정될 수 없는 보다 포괄적 정책 계획이며, 그 정당성과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령,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방향,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이민자 사회통합의 방향, 양성평등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 보장 등 정책의 기본 원칙이 상호 교차하는 바탕 위에서 포괄적인 정책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 ‘장기 정착’의 현실은 결국 가족다양성

첫 번째 대과제인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지원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 장기 거주한 이민자, 다문화 한부모를 위한 지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실태조사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변화, 즉 장기거주 이민자의 증가와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을 반영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계획안 전반에서는 “정착”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강조 된다(‘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장기정착’ 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그리고 장기 거주한 결혼이민자들이 “보편적 가족지원 체계로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현실은 한국에 장기 거주함으로써 곧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하나의 모델로 수렴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은 (계획안에서도 일부 언급되고 있듯이) 다문화가족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더욱 증가한 모습이다. 초기 이민자가 장기거주하여 정착 하면 곧 보편적 가족지원 체계로 편입될 수 있다는 단선적인 기대는 많은 실태조사가 보여주는 결과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가족다양성은 최근 가족정책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제시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즉,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이민자들은 장기 거주하면서 다양한 가족 사건(자녀 출생, 이혼/별거/사별, 전혼 자녀 입국, 이민자 부모의 입국과 돌봄 지원, 이민자의 취업과 맞벌이, 배우자의 고령화와 퇴직, 자녀 독립 등)을 경험하게 되며, 장기 거주는 정착과 더불어 가족 다양성의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밀한 진단, 적극적인 중장기 대응 필요

가족다양성의 증가는 현행 정책과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며, 따라서 장기거주 이민자의 확대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파악과 대응을 필요로 한다. 계획안의 과제 내용에는 한부모 가족, 1인가구, 노령 가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귀환 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등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전체적인 정책 설계가 일방향적 정착지원이 아니라,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사각지대 대응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기거주 가족의 정책 수요는 더더욱 증거에 기반한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장기 거주자는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사회 적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른바 ‘적응’은 거주 기간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역량의 내용에 따라 적으 수준이 상이할 수도 있다. 이민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교육수준,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에 따른 정책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들은 장기거주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어 보다 모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례, 초보적 생활 한국어는 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한국어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점,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 장기 거주하면서 생활반경이나 네트워크가 한정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다문화 한부모, 체류자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부모 사례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체류자격 관리가 아니라 아동 인권 차원에서 지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에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민 배경 가족들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sup>1)</sup>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 유엔아동권리 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역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성 존중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가족지원 서비스 또한 보다 포괄적인 중장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 교류와 소통 활성화 - 지역사회 참여 확대, 소규모 사업의 연계성 검토 필요

계획안에는 교류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가족센터, 각종 문화시설, 지역사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거나 접점을 늘리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자와 가족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에서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소규모 프로그램, 일회성 사업들이 자자체 주도로 확대되어 왔지만, 몇 가지 내용(음식, 문화, 축제 등)이 반복되는 경향도 많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지역별 격차도 있어서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과 지자체 다문화 관련 사업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실태 분석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 발굴, 연구개발 등도 필요해 보인다.

### ○ 인권보호 및 차별해소 - 지난 성과와 한계를 반영한 제도 발전이 필요

코로나 19 상황에서 2020년 이후 국제결혼과 외국인 입국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직전까지 국제결혼이 증가추세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국형 국제결혼은 중개업체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동아시아의 사례(일본, 대만)와 다른 경로를 보여줄 우려가 크다. 일본, 대만에서는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중개업체 위주의 국제결혼이 감소하였지만,

1) 국내에서 가족생활을 하는 이민배경 거주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은 아니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 예를 들면 동포, 난민, 유학생 가족, 미혼모 외국인여성(김이선 외, 2015), 자녀와 동거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예로, 법무부는 2020년 4월부터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계속 국내체류하면서 중·고교 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부여하였다(재학 중인 경우는 D-4, 졸업한 경우 G-1).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모의 출국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를 2023년까지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상이한 패턴을 보여준다. 그 원인과 부작용은 무엇인지 철저한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중개업체에 대한 규율과 모니터링,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단속,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문제점 검토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일관되게 지속해야 한다.

입국 이전 단계에서 사전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지속 추진이 필요하며,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환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도 정책 과제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국제결혼은 국경을 넘는 가족형성(이른바 초국적 가족, 글로벌 하우스홀딩)이라는 점에서 이민자 주요 출신지에서의 네트워킹과 제원 제공, 국제협력 등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은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다. 피해자와 접촉면에 있는 상담기관, 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 지원에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의 안정성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과제 내용에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상담소 등 상담실적 세분화”가 제시되어 있는데, 5개년 기본계획 과제로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으로 보인다. 우선 상담 내용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하여 실태 파악을 내실화하고, 상담 지원의 대응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이주여성 폭력피해 상담에서도 피해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피해들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기존 쉼터에서는 피해 여성의 위치 노출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없이 생활상의 불편과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 불편 사례가 많다고 한다. 향후에는 기존의 쉼터와 더불어 폭력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진단하고 새로운 지원을 개발하는 체계적 대응이 촘촘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진출 확대

장흔성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1. 자립 및 취·창업 역량강화

### 1) 자립 및 취업 기초소양 함양 지원

- 기존의 취업 교육에서 설계부터 변화 필요
- 한국어 내실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단계별, 토픽, 학습언어, 직무관련 언어: 글로벌 레یدی → 회계, 수출입, 영역별 통·번역, 학업, 사법 통역, 상담통역, 발음, 작문 등)
-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성과 내외 자산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 파악
- 센터의 취업 교육 역할 한계(결혼이민자 이용 년 수에 따른 수요에 맞는 역량 강화 한계, 초기 교육이 집중)
- 본국에서의 학력과 관련 자격증 인증을 위한 국가 간 협약이 선행
- 다문화 전문 전담인력 양성이 사업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2) 직업교육 훈련 등을 통한 취업 및 직무 역량강화

- 새일센터, 고용노동부 등 연계 기관의 다문화 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성에 의문: 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 다양한 직업 군 교육(기존 취업 역량교육에서는 차별성 발견의 한계)
- 생활 밀착형 일자리 창출은 지역 특성에 따른 역량교육(기획자의 지역 이해가 필수)
- 고령화 대비 돌봄 인력 확보
- 지역 빈 일자리나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직업교육과 직무 훈련이 필요(주기적 지역 일자리 실태 조사 필요)
-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협의회, 요식업 협회, 숙박업 협회 등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자원 공유



## 2. 취·창업 기회 확대 및 지속가능성 제고

### 1)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연계

- 현재 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이 비정규직, 단순 노무직이 집중되어 직업 고도화가 절실한 상황 (노년기에 접어든 결혼이민자의 심각한 생활고)
-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이민정책 완화에 따른 뉴커머의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개발의 최적기 도래
- 지역특화비자 제도의 지역 통합 전담인력
- 수출입을 위한 전문 바이어, 상품 설명회 등 수출입 전문가
- 병원 외국인 코디네이터
- 송금, 적금 대출 등 금융 분야의 전문가
- 이주민을 위한 정서 지원 상담 전문가
- 출신국어로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유학생 및 초기 입국자 대상)
- 일상 안정성을 담보하는 보험 설계사(삼성생명 외국인 보험 지원단의 외국인 설계사)
- 외국인 범죄와 법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법 통역사
- 관광통역 안내사 및 문화재 해설사
- 숙박업

### 2)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 및 경영지원

- 출신국 이주민 유입에 따른 수요 급증 창업 분야
- 음식 밀키트 공장(유학생, 외국인 대상으로 성업 중인 결혼이민자 재원 부족으로 열악): 시장성이 매우 높음
- 식자재수입 유통
- 출신국 요리학원
- 라이브 커머스

### 3) 결혼이민자 영농 정책 지원

- 농촌 생산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결혼이민 농가가 대안으로 부상
- 경북 베트남 농부, 강원도, 충북 청원(역대 농가- 초기 기피 하던 농수산업이 아님)
- 의성 참외 수정(비닐하우스 내 작업 등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는 더위에 강점)
- 친정의 친인척과 출신국 계절 노동자 안정적 노동력 확보: 출신국 가족 유입이 합법적, 정서적 등 강점

- 현재의 친척 범위 확대 필요
- 출신국 가족 지역의 안정적 노동력 확보를 위한 관련 교육과 사회통합 교육과 지자체의 지원
- 출신국과의 네트워크로 농 수산물 판로 개척
- 계절 노동자 공공형 일자리에선 전문 관리 인력이 필수(기술, 노동권 등의 인권, 의료, 주거: 포항, 영양 등 계절 노동자 전담인력으로 베트남 결혼이민자 계약직으로 채용)

#### 4)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 모니터단. 근로감독관 참여 매우 고무적임
- 다누리 배움터 매뉴얼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과 예산 확충
- 센터를 통한 지역 맞춤형 시민교육 활성화
- 유튜브를 활용한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예: 글로벌 레이디 다)

### 3.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및 역할 강화

#### 1) 결혼이민자의 정책 과정 참여 활성화

- 광역·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할당하여 정책 참여와 정보 공유 기회 부여
- 학교운영 위원회, 등 형식적 위원회에서의 내실화
- 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센터에서 시행

#### 2)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리더 배출: 조직 관리, 의사소통 등의 리더 교육이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등 생활 밀착형으로 참여 기회 확대
- 결혼이민자가 부녀회, 새마을회,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회원으로 활동 등 개인적 영역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론화 과정에 있어 필요

## 자녀성장단계별 학업진로지원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0년 처음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로 벌써 4차에 이르렀습니다. 그 간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고, 이 중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수립해 왔습니다. 즉, 초기 기본계획에서는 출생 및 초기 성장에 대한 계획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점차 학령기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학령기에 맞는 지원정책들이 수립되었고, 이들이 중고등학교 연령으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진로지도 등 해당 연령에 맞는 정책들이 수립되는 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볼 때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4가지 큰 정책의 방향 중 특히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4차 다문화가족자녀를 위한 지원체계의 방향을 보면 자녀의 연령과 배경,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계획들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적으로 보면 영유아 및 미취학연령, 초등취학전후연령, 중고등학생연령, 후기청소년기 및 청년기 연령으로 구분하였고, 영역별로는 가족환경, 학교환경 및 지역사회환경으로 나누었으며, 이주배경유형별로는 중도입국자녀와 귀환다문화가족자녀 등을 고려하였고, 각 셀별로 주요 과제들을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상황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요구도를 분석하고 과제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 제3차까지의 기본계획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차별성은 자녀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지원범위를 넘어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즉, 이주배경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등 보다 넓은 범위의 대상자에 대한 정책을 계획에 포함하였고, 연령적으로도 후기청소년기에 대한 고려를 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계획에 비하여 범위를 넓히고 있고,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시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 더 다듬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족하나마 제가 지금까지 수립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주배경청소년, 중도입국자녀 현황 및 실태파악추진과 관련하여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규모파악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라는 과제가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자녀 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부모 중 한명은 한국국적을 지닌 가정의 자녀들이 주 대상입니다만, 한국사회의 다문화지형은 급속히 변화되고 있어서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자인 가정의 자녀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의 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들의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한국 사회에 장기거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자녀 및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대상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파악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 작업들이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왔습니다만, 19세에서 24세의 후기청소년기, 학교밖청소년, 외국인가정자녀 등 아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추진할 부분이 있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현재와 같이 중도입국자녀 및 학교밖 다문화청소년 지원강화라는 과제에 포함하기 보다는 좀 더 큰 영역으로, 예를 들면 근거기반 다문화가족정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또는 이주배경청소년 통계구축 등으로 별도의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 통계구축과 관련된 필요한 과제들을 좀 더 개발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정책이 좀 더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통계구축의 문제를 단순히 중도입국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문제로 국한시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등록이주아동 실태 파악의 과제도 통계구축 방안으로 함께 포함하여 묶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통계구축과 관련하여 만일 근거기반 정책추진관련 영역이 추가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정기적 추진이 과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자녀파트가 있으나 이주배경청소년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가 있습니다만, 역시 이주배경청소년 전 연령의 대부분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영역별 요구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가 2021년에 한차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전체적인 실태와 그 안에서 여러 유형별 위치, 특히 다문화가족자녀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보다 거시적으로 한 단계 위에서 조망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태조사를 대표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모파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모파악과 실태조사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요구부합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기 및 청년 대상 지원이 계획에 포함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점차 성장하여 초기에 입학준비를

하던 것에서 나아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막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를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현재 대학교 4학년 연령이고, 고졸 이후 사회진출을 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이 개발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후기청소년기 및 청년자녀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수요 등 실태파악 추진의 부분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함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직업프로그램 다양화 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제시된 내용들 보다 조금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방향성이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진로지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진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다문화’ 보다는 ‘청소년’이라는 특성이 더 강한 아이들이고, 학교나 지역 현장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진로교육을 수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선택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파악과 그에 근거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특별한 진로영역이 있거나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 프로그램 관련 정책의 방향이 ‘다문화’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제 4차 계획에서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통합적인 진로교육 내에서 기본적인 진로교육을 하되, 다문화청소년들의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로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과제 중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확산시키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일반 전체를 위한 활동에 전문성이 있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다문화청소년만을 별도로 선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하되, 국내출생자가 아닌 중도입국자 등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이를 일반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이 하는 것이 나은지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 교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유인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한 유사한 사례에서 보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특별히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후기청소년기 아이들의 경우는 사실상 노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공간에 갈 시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 활동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보다 실질적인 정보나 지원이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문화 친화적 사회 조성’에 대한 토론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다문화 친화적 사회 조성’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국 사회 다문화 구성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는 2019년에 252만 여 명에 이르렀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204만 여 명), 2021년(196만 여 명)에는 감소하다가 2022년(10월 기준 220만 여 명)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법무부, 2022). 또한,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다문화 구성원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성원(ethnic-group)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가 2012년 시행된 이후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계속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2012년 51.17점, 2015년 53.95점, 2018년 52.81점, 2021년 52.27점, 100점 만점). 그리고 언론 기사를 검색해보면 인종차별 관련 사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시선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종 차별에 대한 이중적 태도입니다. 주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한국인(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분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차별에는 둔감한 태도가 그것입니다. 백인계통 인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인종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도 관련됩니다. 또 다른 측면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표면적 의식과 잠재적 의식의 괴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잠재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본인의 희생 또는 헌신을 감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의식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 모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 친화적 사회 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습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기본계획 발표 자료에 담긴 ‘다문화 친화적 사회 조성’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문화 친화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망라하고 있고, 시의적절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다문화 수용성 실태에 근거해서 다소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고, 그 고민이 정책에 더욱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1.

첫 번째 고민은 (팬데믹 상황을 제외하면)다문화 구성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 수용성 증진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기도 하는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종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양적 질적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다문화(이해)교육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은 2015년 5.5%, 2018년 4.6%, 2021년 5.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다문화 구성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이해)교육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이해)교육 참여율이 종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2015년 25.7%, 2018년 32.4%, 2021년 53.6%).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 가운데 여전히 절반 가량은 다문화이해교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참여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정적 상관을 이루고 있는 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22)를 감안하면, 성인과 청소년 모두 다문화이해교육 참여 경험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질적인 측면은 더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다문화이해교육의 참여 경험자 중 70%가 다문화이해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의 내용을 교육받지 않은 실정이어서 교육 내용의 전면적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이해교육의 참여 경험은 점차 확대되는 반면에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2015년 67.63점, 2018년 71.22점, 2021년 71.39점) 다문화이해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정책적 노력들의 내용이 다문화 수용성의 본질과 궤를 같이 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성 캠페인, 축제를 통한 단순 체험 등이 새로 이주한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상생의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높이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표면적 의식을 넘어서 잠재적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캠페인, 축제, 홍보 등의 형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방법이 다문화 수용성의 본디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정책 사업들의 성과가 표면적 의식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의례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생색과 둔감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 초기 시절의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찾는 것에서 벗어나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결을 맞추어, 다문화 수용성 관련 정책들이 다문화 수용성의 본디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수용성 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기제와 요인이 무엇이고, 그 비중은 어떠한지를 따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양적 질적 강화를 꾀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수용성 관련 정책이 다문화 수용성의 본질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다문화 수용성 관련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2.

두 번째 고민은 대상별(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증진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고민과 별개가 아닌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상은 세대별로 구분하면 노인, 중장년, 청년, 청소년 등으로, 직업별로는 공무원, 군인·경찰, 교사, 기관 종사자, 회사원, 자영업자, 학부모 등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문화 수용성 관련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학교, 청소년기관, 시민단체, 각종 센터, 해당 직장,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주요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의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발표자료에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보완과 강조의 차원에서 몇 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할뿐만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2). 따라서 시민교육, 직장교육, 학교교육 등 다양한 대상과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다문화이해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시민교육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평생교육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평생교육 차원의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제안하고, 국가 온라인 공개 강좌(K-MOOC)에도 관련 강좌를 확대 강화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강좌 개설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교육에서도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 강화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직장인들의 법정 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sup>1)</sup>). 또한, 공무원과 군인·경찰은 직무 특성상 다문화 수용성이 더욱 각별하게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들 대상의 종전 교육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승진 또는 재교육 관련 과정을 포함한 각종 연수과정에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강좌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낮습니다(여성가족부, 2022).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역 주민간 접촉 횟수는 높고 익명성은 낮을 수 밖에 없는데, 다문화 수용성이 낮다면 다문화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문화구성원들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버티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초지자체 수준, 특히 중소도시(읍면) 또는 군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진지하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 자료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도래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길 기대한다면,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성장기에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자녀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인식과 실천을 체득하게 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본계획 정책과제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다문화 자녀 지원 관련 정책 방안이 작동되는 과정에 역차별 논란이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이러한 파장이 누적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 이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도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의 다문화이해교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학교와 관련 기관의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과를 통한 다문화이해교육이 비교과를 통한 그것보다 더욱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교과를 통한 다문화이해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과를 통한 다문화이해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과서 모니터링 및 개선,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실태 확인 및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참여 경험은 미미한 수준(다문화교육 참여 청소년 중 학교 외 기관 경험자 2015~2021년 15% 내외)이어서, 이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1) 현재 직장인의 법정 의무교육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연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사회는 먼 훗날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허상이 아닙니다. 주요 다인종 국가들이 인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갈등과 충돌의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 이행의 과도기인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앞선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쫓아갈 것인가, 평화의 공존으로 안착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지향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불안한 동거가 아니라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기대한다면, 지금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바로 그 시점입니다.

# Memo

Ruled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